

한국사회의 종교갈등 유형과 불교적 해소방안 연구

성우(서인렬)

[국문 초록]

냉전기를 거친 21세기는 평화와 안정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이어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9.11 테러가 발생하였으며, 그에 대응하여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가히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문명 충돌로 표현할 정도이다. 이제 21세기의 최대 화두는 종교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그 해소 방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문제는 한국에서도 종교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갈등을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교갈등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요구되는 바,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갈등을 종교내부의 분쟁보다는 종교간의 갈등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종교갈등의 유형을 갈등의 강도를 기준으로 종교편향이나 종교차별, 종교분쟁이나 종교전쟁 그리고 종교별 인종청소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갈등의 유형은 종교분쟁의 이전 단계인 종교편향과 종교차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총인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무종교인과 높은 국민의식수준이 종교갈등을 한층 완화시키는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불교는 그 교리자체 뿐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

부터 종교간의 대화와 화합을 건지해왔다. 또한 불교는 종교갈등의 해소방안으로 생각되는 칠멸쟁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필요조건이지 결코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아무리 좋은 마음과 이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이웃종교인들의 자성과 자각이 없으면 종교갈등은 재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적 해결방법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법률적 장치가 요청된다.

주제어: 종교갈등, 종교차별, 종교분쟁, 종교청소, 칠멸쟁법.

1. 서론

20세기를 전쟁의 세기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냉전기를 거쳐서 평화와 안정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전 세계에 팽배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한쪽 주역이었던 소련연방이 1991년 붕괴되면서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만이 홀로 남게 되었다. 그에 따라서 세계 질서는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과 기대가 만연하였다.¹⁾

그러나 2001년 미국 WTC 건물이 비행기 자살 테러 공격으로 붕괴되면서 21세기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것은 미국을 대변하는 조지부시의 기독교 세력과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는 빈 라덴의 이슬람 세력 사이에 벌어진 큰 충돌이었다. 이것은 중세 십자군 전쟁 이후 새롭게 벌어진 종교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미국은 이 사건을 기회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쳤다.²⁾ 미국의 이라크 침공전쟁의 명분은 대량살상무기의

1) 保坂俊司(2008), 『世界の宗教問題の基本』, 東京: 青春出版社, pp.3-6.

2) 2003년 시작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전투 종료 임무 선언에 따라 개전 7년 5개월 만에 31일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이라크전은 잠재적 군사위협을 이유로 선제 억지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전쟁으로 개전 이전부터 많은 논란을

제거에 있었지만 내용은 기독교 세력의 대이슬람권에 대한 군사공격이었다. 여기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진입한 것은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의 제거와 이슬람 세계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 사이의 문명 충돌로 표출되었으며, 기약 없는 비극적인 전쟁의 지속으로 나타났다.

종교 간의 대립은 서로 다른 국가나 문명권의 충돌로 표출되는 거대한 갈등 구조도 있지만 한 지역 내에서의 소규모 충돌로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적 동일 문화권에서 같은 민족과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도 종교간의 갈등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규모 국지적 갈등 구조에도 종교문화권의 거시적 요인들이 내포되어 있다.

종교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교단 형성 초기의 불교계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초기불교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부처님의 상수제자 중의 한 사람인 마하목갈라나 존자가 집장바라문들이 보낸 자객들에 의하여 피살된 것이다.³⁾

또한 중국에서는 삼무일종의 범란으로 엄청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삼무일종이란 남북조 시대의 북조에 해당하는 북위의 태무제, 북주의 무제, 당의 무종, 후주의 세종 때에 행해진 화불사건을 말한다. 이들 사건의 전말을 통해 밝혀진 불교박해의 원인은 도교와 유교, 그리고 불교의 첨예한 대립의 과정에서 국가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불교 재산

났었다. 1991년 걸프전, 1999년 코소보전, 2002년 아프가니스탄전 등 미국이 개입한 대규모 전쟁 선례는 도발을 단행한 세력에 대한 사후응징의 형식이었지만 이라크전은 대량파괴무기와 테러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사전응징의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연합군은 국제적인 반전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엔의 승인도 없이 2003년 3월 20일 이라크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으며 전쟁을 시작해 ‘침략전쟁’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연합뉴스』, 2010년 8월 31일자.)

3) 성열 위음(2002), 『부처님 말씀』, 현암사, pp.57-61.

을 몰수하고, 유교와 도교의 불교 탄압 시도 등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나타났다. 특히 후주 세종은 국가재정의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를 박해하고 사찰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법난을 일으켰다.⁴⁾

종교간의 갈등과 분쟁은 그 불씨가 작을 때부터 꺼야 한다. 그것을 방치하면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고 나중에는 건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종교 갈등은 종교편향과 차별이 불씨가 되고 그것이 결국 종교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교갈등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 징조의 시작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과 차별적 언동과 행태로부터 비롯되었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도 일부 종교조직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양상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일부 개신교 집단들의 불교계를 공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불교계는 이에 대하여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종교전쟁을 예견하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종교조직 간의 갈등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특히 종교가 정치세력과 결합할 경우 이와 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폭력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심각해지고 있는 종교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과 유형, 전개과정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종교간의 갈등과 분쟁을 유형화하고 우리나라의 종교 갈등의 형태는 어떤 특성을 띠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종교간의 화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종교 갈등을 극복하고 불교계의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편/ 남현옥 역(1993), 『중국불교와 불교문화』, 우리출판사, pp.124-128.

II. 종교갈등의 개념 정의와 유형 분류

1. 종교갈등의 개념

종교갈등(religious conflict)은 여러 가지 주체와 범주 속에서 다양한 양태를 띠고 있다. 한 개인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가치관과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면적 갈등,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종교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적 갈등, 그리고 조직이나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갈등 등의 여러 차원이 있다. 여기에 종교 문화적 차이나 종교 문명의 대립과 같은 역사적 문제가 내포된 거시적 갈등 구조도 있다.

이 글에서는 내면적, 대인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적 종교 갈등의 문제보다는 종교집단과 조직 사이의 대립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종교갈등 유형은 갈등에 개입하는 종교유무에 따라서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갈등, 이종교간의 갈등, 동일 종교인 사이의 갈등 등의 양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갈등은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특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도 최근 서구 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는 절대신의 존재 유무에 대한 논쟁이 자리잡고 있다. 이 논쟁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상징적 인물은 천체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이다. 그는 최근 『위대한 설계(*Grand Design*)』라는 저서를 통해서 “우주가 창조주의 뜻이 아니라 무(無)의 상태에서 탄생했다”라고 밝혀 종교인과 비종교인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촉발한 바 있다.⁵⁾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갈등은 종교와 과학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과학자들 중에서는 신학을 부정하거나 부질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종교인들은 과학의 오만, 무지의 소치 등으로 과학적 연구 성과들을 폄훼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종교인들을 무종교인 혹은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유럽에서 과학이 서구 종교에 대한 공격이 가열되면서 2000대 후반 미국의 무종교인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⁶⁾ 1980년대 미국의 무종교인의 비율이 3~5%에 불과하였는데 2007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6.1%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미국 성인의 1/4인 자신의 종교를 바꾸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44%는 같은 종교 내에서 교파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국의 종교지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⁷⁾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과학과 종교의 논쟁, 그리고 각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각종 저술이 증가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개신교의 전통이 매우 강한 미국에서 무종교인이나 개종하는 사람의 비율이 많아지는 것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 혹은 이종교인 사이에 심리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보면 무종교인이나 이종교인에 대해 포용력이 커지면서 극단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연합뉴스』 2010년 9월 8일자 참조.

6) 2008년 종교사회문제를 연구하는 퓨 포럼(Pew Forum)이 미국의 성인남녀 3만5천 명으로 대상으로 종교성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종교인은 16.1%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18-29세)에서는 25%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2007년 5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되었다. (『크리스천 투데이』, 2008년 3월 6일자.)

7) 미국에서 불교, 이슬람교 등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8%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카고대학의 ‘전미여론조사센터’가 실시하는 ‘일반적 사회추세 조사’에 따르면 미국 부부 중 서로 종교가 다른 경우는 20년 전인 1986~1988년에는 25.9%였으나 2006~2008년에는 31%로 증가했다. 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과 결혼한 가구의 비율이 1986~1988년에는 6.3%였으나 2006~2008년에는 11.4%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⁸⁾ 또한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종교와 공공생활을 위한 퓨 포럼’(PFRPL)이 실시한 ‘2008년 미국의 종교 실태’ 조사에서는 미국 부부의 37%가 서로 종교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01년 현재 개신교 신자의 20%는 다른 종교 신자와 결혼을 했고, 이슬람 신자 중 39%, 유대교 신자 중 27%, 가톨릭 신자 중 23% 그리고 몰몬 신자 중 12%가 다른 종교 신자와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종교인의 증가는 기독교 전통이 강한 호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호주 통계국(ABS)의 2006년 센서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호주인 중 무종교인의 비율은 1971년 6.7%에서 2006년 18.7%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무종교인은 7.9%에 불과한데 비하여 12~20세 사이의 연령 그룹에서는 23.5%로 나타났다.

1911년 호주의 기독교인 비율은 96%였지만 2006년 64%로 하락하였다. 또한 불교인구 비율은 2.1%로 증가하였고, 이슬람 1.7%, 힌두교 0.7% 등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구 중에서도 가톨릭은 26%, 성공회 19%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⁹⁾

대표적인 진화생물학자인 영국 옥스퍼드대의 리차드 도킨스 교수는 『만들어진 신』을 출간하여 무신론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가

8) 『미주 한국일보』, 2010년 8월 4일자 참조.

9) 『호주 동아일보』, 2009년 1월 30일자.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국인본주의자협회(British Humanist Association, BHA)는 2008년 12월 말부터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 등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중 800대에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라는 광고를 부착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무신론자의 광고는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에서도 부착된 바 있다.

이러한 무종교인의 광고에 대하여 스페인에서는 일부 종교인들이 ‘신은 존재한다. 예수 안에서 인생을 즐겨라’(God does exist. Enjoy life in Christ)라는 광고를 내보냈다. 또한 로마 교황청 폴 푸파르(Paul Poupard) 추기경은 “어리석고, 무의미하며,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비판하면서 논쟁이 가열되었다.¹⁰⁾

이러한 논쟁의 와중에서 “영국인들 중에는 회개한 기독교인들을 뜻하는 ‘거듭난 기독교인(born-again Christian)’에 빗대어 ‘거듭난 무신론자(born-again Atheist)’라는 문구를 티셔츠나 자동차 범퍼에 붙이고 다니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무신론자들의 공격은 이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을 “인본주의자(humanist), 세속주의자(secularist), 합리주의자(rationalist) 등으로 부르며, ‘똑똑한 자(bright)’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도킨스 교수는 “종교는 세금감면, 노력 없는 존경, 공격당하지 않을 권리, 어린이들을 세뇌할 권리 등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라고 비판한다.¹¹⁾

10) 버스 광고를 위해 BHA는 14만 파운드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BHA의 문구를 스페인어로 번역한 광고는 스페인 무신론자연합과 자유사상가협회(Union of Atheists and Freethinkers)가 주관하는 것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해 향후 수도 마드리드를 비롯해 발렌시아·세비아·사라고사·빌바오 등 스페인 주요 도시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이탈리아에서도 유사 광고가 부착되었다. (『백찬홍의 세상보기』, 2009년 1월 18일자 Internet <http://btlmkt.egloos.com/2427944> 자료 참조.)

11) 이러한 논쟁을 촉발시킨 영국인본주의자협회(BHA)는 1896년 창립되었으며, 주로 과학 및 인문 계통에 종사하는 지식인 6,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성공회가

종교와 과학의 논쟁을 격화시키는 저술들 중에는 칼 세이건(2010)의 『과학적 경험의 다양성』,¹²⁾ 리처드 도킨스(2007)의 『만들어진 신』,¹³⁾ 데이비드 밀스의 『우주에는 신이 없다』¹⁴⁾ 등이 출간되었다.

둘째, 같은 종교 내부에서의 갈등도 심각하게 표출된다. 같은 종교 집단 속에서의 갈등은 대부분 정통성 논쟁이 중심으로 이룬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교권 쟁탈이나 교세 다툼의 세속적 갈등이 숨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독교의 정통성 논쟁은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개신교 내부에서의 정통성 논쟁은 사이비 혹은 이단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에 개신교 개념의 정의와 해석의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내부의 갈등은 신학 논쟁으로 승화되고 있는 편이다. 때문에 종교 내부의 폭력성은 그다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신학 논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도올 김용옥과 개신교 및 가톨릭 목회자들 사이의 논쟁이다.

도올과 개신교의 논쟁은 『도올의 도마복음 이야기』가 발표되면서 세인의 큰 주목을 끌었다. 도마복음서에 대한 도올의 주석은 “신약성서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뒤엎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맹목적 신앙과 보수적 교단의 이해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에

국교인 영국에서 무종교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다. 영국에서 BHA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2005년 런던에서 폭탄 테러로 52명이 사망하면서 기성종교에 대한 반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http://btimkt.egloos.com/2427944> 자료 참조.)

12) 칼 세이건(2010), 『과학적 경험의 다양성』, 사이언스북스 참조.

13) Richard Dawkins(2007), *The God Delusion*, Brockman Inc.; 리처드 도킨스 著/이한음 옮김(2007), 『만들어진 신』, 김영사, 참조. 니키 김블은 이 책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신 Vs 스스로 있는 신』이라는 저술을 통하여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14) 데이비드 밀스 저/ 권혁 옮김(2010), 『우주에는 신이 없다』, 돌출새김 참조.

게는 하나의 충격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도올은 자유로운 신학적 논의의 전개, 성경은 인간의 지혜의 소산일 뿐이며 통시적, 공시적 분석 필요, 유신론과 무신론의 양자 모두의 자유 인정과 종교적 폭력 배제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영지주의 기독교에서 보여지는 신화적 세계관으로부터의 탈피 등을 제시하면서 도마복음서를 출간하였다.

가톨릭계에서는 도올의 기독교적 주장에 대하여 “범신론적 무신론”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도올이 김수환 추기경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도 신(神)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 인격신(人格神)이라는 점에서는 회의적입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격신에 대해 회의한다는 것은 유일신, 나아가 삼위일체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따라서 창조주 하느님을 부정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결국 도올은 이 말을 통해 이 세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이며, 신(神)은 따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주 안에 편만하게 존재하는 신성(神性)일 따름이라고 주장한 셈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¹⁵⁾

기독교계 내부에서 종교적 갈등의 또 다른 사례는 찬송가공회의 구성과 운영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찬송가공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찬송가위원회 측과의 갈등이 노정되었다. 이 갈등의 내부에는 저작물 관리에 대한 판권의 처리가 문제의 근원이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법정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불교계 내부에서 불교교리 논쟁은 그다지 표출되지 않는다. 불교 사상이나 철학 등을 놓고 견해 차이에 의하여 대립되는 경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불교계의 갈등은 종단 사이의 재산 갈등, 구성원 사이의 소임자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 등이 크게 부각되는 편이었

15) 차동엽 신부, 『도올 사상에 대한 가톨릭적 비판』, 2008년 6월 7일자, <http://blog.naver.com/islmoa/120052726425> 참조.

다. 다만 조계종단의 1994년 종단개혁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1998년 종권 구조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된 내부 갈등은 매우 격렬하여 부정적으로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여파로 종단은 역동성을 찾을 수 있었으며, 나아가 새로운 제도적 질서를 확보하는 긍정적 효과도 거두었다.

셋째, 이종교간의 갈등은 종교조직의 특성, 문화, 그 지역의 정치적 상황, 역사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표출된다.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갈등은 각각의 사례에 따라서 다양한 요인들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종교간의 갈등은 하나의 시각이나 잣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이종교간의 갈등은 종교 세력의 직접적 충돌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사례는 극히 희박하다. 종교 간의 충돌을 부추기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득이나 경제적 실리를 취하려는 세력의 개입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8년 전국불교도 대회가 개최되면서 종교간의 갈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고조된 바 있다. 이 사건의 표면적 원인은 정치권력의 편향적 태도에 대한 불교계의 반발이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정치인이나 집권층의 종교관이 빚어낸 사건에 대하여 불교계가 조직적으로 반발한 사건이다.

이종교간의 갈등이 어떤 양태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갈등을 규정하는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표현된다. 예를 들면 한 사회 내에서 종교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종교적 편향, 차별, 갈등, 분쟁, 전쟁 등의 개념으로 점차 확대시켜 보는 견해도 있다.¹⁶⁾

종교편향은 정치지도자 혹은 조직의 장 등 의사결정 집단의 수장들

16) 김웅철, 『종교분쟁으로 인한 국론 분열의 폐해』, 2008년 8월 조계종 중앙종회 연수자료 참조.

이 자신의 종교적 성향을 반영하여 행정행위를 하는 일련의 현상을 말한다. 종교편향은 대부분 개인적 종교성향이 조직 내의 문제로 비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종교차별은 종교편향이 공개적, 문화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종교차별이 정치권력과 연계하여 제도적인 폭력으로 나타난다면 이를 종교탄압이라고도 규정할 수 있다. 직원 채용시 종교적 조건을 내걸고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 행위는 대표적인 종교차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종교갈등은 종교편향과 종교차별로 인하여 개인, 조직, 교단, 정치세력 간에 이견을 표출하거나 종교와 관련된 이해관계의 대립이 사회문제화하는 것을 말한다. 종교 갈등은 가족이나 이웃과 같은 대면적 접촉이 빈번한 사회단위에서 발생하는 종교인들의 개인적 갈등, 소규모 종교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경쟁하는 종교조직의 갈등, 그리고 전국적 규모에서 종교적 가치관의 대립이 발생하는 종교간 갈등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종교분쟁은 종교갈등이 정치적 쟁점을 넘어서서 쌍방간에 폭력과 테러를 가하는 것과 같이 과격화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종교갈등이 격화되어 방화와 폭행, 각종 형태의 공격이 노골화하는 경우 종교분쟁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¹⁷⁾ 우리나라는 무종교인이 48%에 육박하고, 교육수준도 높아서 어느 정도 종교적 완충작용을 하고 있으며, 특정종교가 사회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종교분쟁의 발생이 억제되고 있다.

17) 동일 국가 내에서 종교분쟁은 필리핀(가톨릭 vs 민다나오 섬의 이슬람반군), 인도네시아, 스리랑카(불교 vs 힌두교), 나이지리아(이슬람 vs 기독교), 아일랜드(가톨릭 vs 개신교), 구 유고연방의 보스니아(이슬람 vs 그리스정교회), 레바논(기독교 vs 이슬람) 등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내전의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종교전쟁은 무기류 등이 동원된 대량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년 동안 지속된 십자군 종교전쟁이다. 종교전쟁은 특정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내전의 형태와 국가 혹은 민족이 충돌하는 전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교전쟁은 소수종교 혹은 상대종교를 말살하려는 종교청소, 종교적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복속전쟁, 그리고 종교적 독립을 추구하는 독립전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의 빌프리트 뢰리히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원인은 대부분이 종교 간의 갈등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인도와 파키스탄 등이 종교 근본주의를 내세우는 집단 간에 벌어지는 전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⁸⁾ 종교전쟁은 종교를 정치화시키는 집단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 근원은 ‘종교 근본주의’ 때문이라는 것이 빌프리트 뢰리히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매우 의미가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오류가 있다. 자기 종교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교인들 중에서 종교전쟁을 부추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근본주의 교리를 악용하고 있을 뿐이다.

2. 종교갈등의 단계적 유형

종교간의 갈등은 종교적 편향과 차별의 형태와 종교적 대립과 충돌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종교적 편향과 차별은 종교간의 우열이 뚜렷한 상황에서 우세한 종교 세력이 열세의 종교 세력에 대하여 일방적

18) 빌프리트 뢰리히 저/ 이혁배 역(2007), 『종교근본주의와 종교전쟁』, 바이북스, 참조. 저자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종교분쟁이나 테러를 통해 인간이 종교를 오용하고, 정치화시키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주장하고, 그 실질적인 사례로 2001년 9·11테러,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발 테러, 러시아의 베슬란 학교 인질극, 2005년 런던 지하철 폭발 테러 등은 정치화된 종교권력이 광신적 테러리즘의 형태로 표현된 단적인 예”라고 주장하였다.

으로 가하는 차별적 행동과 불평등한 냉소와 시각으로 정의할 수 있다.

1) 종교적 편향과 차별적 갈등

종교적 편향과 차별적 갈등은 한 사회 내에서 종교간의 차이에 의하여 처한 입지나 지위가 다를 때 주로 발생한다. 종교갈등의 유형 중에서도 편향과 차별은 다소 차이가 있다.

종교 편향은 특정 종교적 가치관에 몰입하여 자신의 종교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종교를 열등하게 생각하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종교적 가치관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말한다.

반면에 종교적 차별은 편향적 사고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경우를 말한다.¹⁹⁾ 이것은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차별적 행위를 행한 것을 말한다. 차별적 행위는 합리적 차등행위와는 구별된다. 합리적 차등행위란 적법한 근거에 의하여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²⁰⁾ 종교적 차이가 있다고 해도 적법한 근거에 의해 차이를 두었다면 이것은 종교차별이 아닌 합리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적 차별은 불법적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 종교적 차별에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위법한 차별 행위로서의 괴롭힘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²¹⁾

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4일 종교차별 관련 자문회의 결과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의 모 중학교 교사가 수업중 기도를 강요하는 등 종교차별(편향)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해당기관과 신고자에게 통보(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종교차별 사례에 대한 첫 번째 시정 조치 요청이다. (『뉴스 파워』, 2008.11.24, <http://www.newspower.co.kr> 참조.)

20) 박찬운(2008), 『인권법』, 한울, p.418.

21) 윤문희(2006), 『차별의 법적 개념』, 『노동리뷰』 제21호, 한국노동연구원, p.68.

직접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등의 차이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직접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특정 기업체에서 종교를 기준으로 선발을 결정하거나 합격을 취소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간접 차별은 중립적인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하였으나 사회 구조적 모순이나 문제 때문에 특정 종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정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처우를 벗어날 수 없다면 이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위법한 차별 행위로서의 괴롭힘은 종교를 이유로 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감, 모욕감, 모멸감, 혐오감, 위협감을 느끼게 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공격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말한다. 최근 러시아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하는 것은 국적에 근거하여 행하는 위법한 차별 행위로서의 괴롭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종교적 편향과 차별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헌법에 종교의 자유 조항과 더불어 국교 금지와 종교와 정치의 분리 조항이 있다. 우리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적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통합되어 있었으나 1962년 헌법부터는 이 두 종류의 자유를 분리하여 종교의 자유를 독립된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교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종교 실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정 종교의 우대행위를 제한하거나 배제시키기 위함이다. 개인의 종교실행의 자유에는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과도하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경우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종교차별을 용인하는 모순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선교의 자유는 개인들이 선교행위의 대상이 됨으로써 불편을 초래케 할 수 있다.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종교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 1981년 UN 총회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기인한 어떠한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편향과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종교에 대한 몰입이 지나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사고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

2) 종교적 대립과 충돌적 갈등

종교적 대립과 충돌이 야기되는 갈등에는 종교간의 분쟁 혹은 종교전쟁이 자리잡고 있다. 종교전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전쟁은 대부분의 종교들이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제정일치사회에서는 정치적 돌파구로 종교전쟁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인 종교전쟁의 사례는 중세 이슬람교의 정복전쟁(633~826)이다.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반도 밖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시리아·이라크·북부 메소포타미아·아르메니아·이란·이집트 등을 정복하고 여러 곳에 기지도시(基地都市)를 건설하였다. 그 후에도 정복사업은 계속되어 우마이야 왕조 시대에는 서쪽은 북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까지, 다시 711년부터는 이베리아 반도에 침입하였고,

22) 송기춘(2006), 『시민적·정치적 권리』, 『인권법』, 아카넷, p.111.

동쪽은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서부까지 그 지배력이 미쳤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스의 중추부까지 진출한 군은 732년 푸아티에 북방의 싸움에서 패퇴하였으나, 동방에서는 751년 여름 탈라스 강의 싸움에서 고구려 출신의 고선지가 이끈 당군(唐軍)을 대파하고 중앙아시아의 지배권을 확보하였다.²³⁾

십자군 전쟁은 유럽의 기독교 연합군이 중동의 이슬람교를 상대로 벌인 200여 년간 8차에 걸친 대규모 원정 전쟁이다. 십자군(croisade)은 가톨릭 교황의 호소로 조직된 기독교적인 성향을 강하게 띤 군대로 알려져 있다. 십자군 전쟁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감행된 중세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국가들이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 대항하여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진 대규모의 군사 원정을 가리킨다.

십자군 전쟁은 초기에는 예루살렘을 탈환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횃수가 거듭되면서 변질되었다. 같은 기독교계 국가인 그리스 동방정교회 국가들도 공격하는 등 교황권 강화와 영주들의 영토 확장 등의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2001년 로마 교황청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리스를 방문하여 과거 십자군에 의한 침략과 학살, 약탈행위 등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했다.

십자군 전쟁이 종료된 이후 벌어진 국제적인 종교전쟁은 30년 전쟁(1618~1648)이다. 이 전쟁은 가톨릭의 지원을 받은 합스부르크 왕가가 개신교 탄압을 한 것이 빌미가 되어 발발하였다. 초기에 이 전쟁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내전은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간의 패권다툼으로 번져서 최초의 국제전으로 확산되었으나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전쟁이 끝났다.²⁴⁾

23) <http://ko.wikipedia.org/wiki>

24) 가톨릭과 개신교를 배경으로 한 정치세력들이 일으킨 30년 전쟁으로 독일 인구의

과거의 종교전쟁은 대부분 종교적 갈등으로 시작되어 국가간의 전쟁으로 비화되는 현상으로 끝을 맺는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전쟁은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전쟁이 종식되어도 지속적인 종교테러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최근 이슬람 세력이 미국을 공격한 9.11테러는 곧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빈라덴이 지휘하고 있는 이슬람세력들은 오랜 적대관계에 있는 서구, 특히 미국 사회를 대상으로 테러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 테러 행위는 국제적 공분을 형성시켰고 미국이 대이라크 전쟁을 감행하는 빌미가 되었다.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는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만들어 더욱 잔혹한 전쟁으로 막을 내리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종교전쟁은 종교와 정치, 인종, 문화 등의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의 종교적 대립과 충돌적 분쟁 양태를 살펴보면 많은 나라에서 이와 같은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필리핀의 경우 카톨릭 인구가 전체 국민의 90%가 기독교인이고, 이중 80%정도가 가톨릭교도이다. 그러나 민다나오 지역은 이슬람 반군 단체인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이 지배하고 있다.²⁶⁾ 모로 이슬람 반군조

4분의 3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우그스부르크 주민은 80,000명에서 18,000명으로 감소하였고, 보헤미아 주민의 4분의 1만 살아남았다고 한다. (<http://ko.wikipedia.org/wiki> 참조.)

25) 이삼열 편(2005), 『아시아의 종교분쟁과 평화』, 오름. 이 책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카슈미르, 스리랑카 등의 종교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평화교육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26) 모로 이슬람해방전선은 모로 민족해방전선에서 독립한 조직이다. 모로 민족해방전선은 1972년 필리핀 대학교 정치학 강사 출신인 누루 미수아리가 창설한 종교조직으로 1986년에는 26,000명의 병력을 소유한 반군으로 성장하였다. 1996년 필리핀 정부와 모로 민족해방전선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공산주의 계열 반군인 신인민군과 모로 이슬람해방전선이 독립하여 현재까지도 무장투쟁 중이다.

직은 무슬림 독립을 목표로 무장 세력을 유지하면서 각종 분쟁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필리핀은 종교적으로 다른 정치세력이 독립을 주장하면서 종교가 정치화되었으며, 그것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2천만 명 중 85%가 이슬람교도이다. 15%는 기독교, 힌두교, 불교 등 소수 종교인들이다. 이들 중에서 특히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들 사이의 충돌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말루쿠 섬에서는 네덜란드 통치시절에 유입된 기독교도들이 분리 독립을 주장하면서 충돌이 일어났으며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약 9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종교전쟁이 발생하였다.²⁷⁾ 말루쿠 섬에는 주로 기독교도들이 거주하였으나 1970년대부터 수하르토 정권이 이슬람교도를 의도적으로 이주시켜 현재는 섬 전체 인구 200만 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도들은 이슬람 이주자들이 공직과 상권을 장악하고 일자리와 사업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종교분쟁은 종교적 요인에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대규모 충돌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상권을 빼앗긴 세력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종교 성전을 주장하면서,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티모르의 내전이나 카슈미르 지역의 분쟁에서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27) 박금희(2005), 『인도네시아 기독교도-무슬림 종교분쟁의 원인: 중부 술라웨시의 뽀소와 말루꾸 군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통권 제15권 1호, pp.131-172.

III. 한국사회의 종교갈등 및 차별 양태

1. 한국사회의 종교갈등 양태

한국사회의 종교적 갈등은 다른 아시아 지역의 종교 갈등과는 아직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특정 종교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종교인구 분포는 불교도가 약 22.8%, 개신교도가 약 18.3%, 가톨릭교도가 약 10.9% 정도로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무종교인의 비율이 전체 국민의 48%에 해당하여 어느 정도 종교적 완충 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의 종교갈등은 대규모 폭력적 분쟁보다는 종교 전파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 종교갈등은 종교조직 간의 직접적인 갈등과 종교인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의한 갈등, 그리고 공직자들의 종교편향과 차별적 행위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갈등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교조직 간의 직접적인 갈등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종교조직들이 신문광고를 통해서 이웃 종교를 비방하거나 개별 조직의 종교 행위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폄하하거나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 갈등은 대부분 드러나기 보다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종교간의 조직적 갈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종교인들의 종교적 성숙도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다수 종교의 다양한 특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불교계는 종교적 포용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적 갈등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종교갈등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

다. 그리고 개신교와 가톨릭 종교단체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도 갈등 완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한 쪽이 문제를 야기하면 이탈자가 생겨서 종교조직 성장과 발전에 저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과도하게 갈등을 일으키거나 분란의 주체로 낙인이 찍히면 포교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갈등을 야기시킬 수 없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특성도 종교계의 조직적 갈등 완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국민 개개인의 종교관의 차이가 개인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례는 종종 있다. 유교적인 제사를 지내는 문제에 대하여 종교적 차이로 집안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사례는 매우 많다. 또한 상장례 시에 어떤 종교 의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벌이는 갈등은 집집마다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결혼 배우자로 적합한가를 놓고 벌이는 갈등의 사례도 있다. 일부 종교인들은 종교가 다른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하는 사례들도 있다.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문제 등은 사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각에서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 그러나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이면에는 종교적 가치관과 문화의 차이가 투영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간의 종교적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조직간의 대립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종교의 차이를 갈등으로 비화시키거나 의도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갈등은 사적인 영역 보다는 공적인 영역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공직자의 종교적 가치관이 종교 편향적 사고를 유발하고, 이것이 정교분리,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공직자의 종교중립성의 유지와 연계되어 쉽게 종교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

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

특정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자신의 종교로 사적인 종교행위를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용인되고 있다. 그러나 종교를 이유로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에서 혹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현상은 종교 차별적 행위로 종교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공직자는 국민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이유로 공직임용에 제한을 가하거나 신앙고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²⁸⁾ 또한 공직자로서 선교를 목적으로 노골적인 종교 표현을 남용하거나 공직을 이용해서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 등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공직자가 종교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건들의 사례를 보면 종교단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예산을 집중 배정하거나 공공행사와 관련된 선교행위를 하거나 공공시설을 특정 종교단체에 특혜로 대여하는 행위 등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이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광부에서는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자료를 통해서 종교차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바 있다.²⁹⁾ 이 자료에 따르면 “종교 차별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종교의 자유를 언론·표현의 자유나 다른 자유보다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호의적 중립을 통한 지원을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 그 이유로 종교차별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종교차별의 세부 유형을 입법과 정책 영역,

28) 수년전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 인턴사원을 모집하는데 특정 종교인만을 선발하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또한 특정 종교인들만을 모아서 협의회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종교편향과 차별의 사례로 볼 수 있다.

29) 문화체육관광부(2009),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교재』, p.60.

공권력 행사 영역, 정치·문화·복지 관련 영역, 종교시설에서의 공적 행사, 종교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행사 등의 영역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³⁰⁾

2. 한국사회의 주요 영역별 종교차별 유형

1) 입법과 정책 영역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차별 문제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 군중제도, 종교 공휴일 지정, 종교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국가 시험 실시 등의 사항에서 부각되고 있다. 종교기관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및 관련 법규는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비영리기관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합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정책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종교조직을 관장하는 종교 법인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종교법인법의 규정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종교적 차별, 혹은 역차별의 논란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군대 내에서 군인들의 종교자유 보장을 위해서 군중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있다. 또한 현행 군 조직

30)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8년 범불교도대회가 개최되는 등 종교간의 갈등이 격화되자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교육 매뉴얼 및 교재개발”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가 2009년 12월에 『종교차별 예방교육 자료집』으로 발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종교차별 사례를 요약 분석하였다.

에는 군종장교와 군종병 제도를 도입하여 군부대 내에서의 종교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종교에 군종제도를 개방하여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종교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소수 종교에 대하여 군종제도를 개방하지 않는 것은 종교차별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군종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종교차별의 소지는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군종장교의 종교별 분포와 비종교인에 대하여 종교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많다.³¹⁾

2008년 말 군종장교의 수는 군목 254명, 군신부 41명, 군법사 47명 등 총 342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종교인구 비율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기독교나 불교의 경우 여러 교파나 종파가 있는데 이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종교 차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이나 크리스마스 등은 대표적인 종교적 기념일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종교 공휴일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출발하였고, 현재 종교적 색채가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종교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에 종교 공휴일의 폐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타종교의 기념일에는 휴가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일요일에 각종 시험을 실시하는 문제도 종교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요일이 종교적 기념일로 보기 어렵고 일요일에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공익적 이유가 있음”을 들어서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31) 지난 2002년 국회에서 개정된 병역법에는 군종 분야 병적편입대상 종교선정 및 군종장교의 지원 자격에 대한 조항에서 “목사, 신부, 승려 그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 불교대학 그 밖에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군종장교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2) 공권력 행사 영역

2008년도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탑승 차량을 경찰이 과도하게 검문하여 범불교도대회로 비화된 바 있다. 불교계에서는 이 사건을 공권력이 종교인을 의도적으로 탄압하고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불자들이 결집하여 시청 앞에서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 행사시 종교차별을 배제하려는 노력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공권력 행사 분야에서 종교차별의 문제는 ① 경찰서 유치인에 대한 종교행사 강요, ② 교도소에서의 종교집회 문제, ③ 군대에서의 종교의 자유, ④ 국공립 병원에서의 종교활동 및 전파, ⑤ 종교적 공간에서의 법집행 유보, ⑥ 특정 종교국가에 대한 출입 제한, ⑦ 공직자 취임식에서의 종교의식, ⑧ 기타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에서 의도적 또는 과실로 특정 종교시설 표시의 누락사례 등으로 나타났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종교행위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모두 종교차별적인 공권력 행사에 속한다.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군대 등에서도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야 하고, 비종교인에게는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국가와 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는 분당 모교회의 신도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인질이 되어 2명이 살해되었기 때문에 시행한 조치였다.³²⁾ 정부에서는 “특정지역에 대한 출국 제한은 이전의 자유 제한으로 사회질서, 공공복리 특히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것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2) 2007년 7월 20일 분당 샘물교회 목사와 신도 23명이 아프간 반군에 납치되었는데 정부에서 약 660억원을 투입하여 21명만 구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서 지리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도적 또는 과실로 특정 종교시설 표시의 누락 사례는 공무집행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당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종교 차별 행위를 했는가의 판단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내릴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명백한 종교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하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누락된 불교 사찰 표시를 수정 보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3) 정치, 문화, 복지과 종교관련 영역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전국의 주요 도로 표지판에서 불교의 전통사찰 표시가 모두 사라진 적이 있었다. 즉 종교 유적지 표시에 대한 종교 차별 논란이 일자 이를 모두 삭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종교적 상징성이 있는 문화 유산은 문화적, 예술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 위반은 아니라는 판시가 있었다. 그 결과 종교유적지, 화폐도안에서의 문화적 상징 표시, 종교적인 문화행사의 전시 포스터 게시 등은 가능하게 되었다.

종교단체 등이 행하는 문화 축제, 무료 진료, 봉사행사, 학습센터에서의 교육 등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더라도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지급되고 그 효과도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방해하는 등 차별적인 조치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면 정교분리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렇지만 보건, 교육 등 세속적 목적이 아니라 종교전파를 지원하거나 종교적 상징물 신축 지원 등 특정 종교를 진흥하는 결과가 야기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특정 종교단체나 종교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교육, 복지 등 세

속적인 합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교간의 형평성이 지나치게 위배되거나 특정 종교에만 지원할 경우에는 위법적 요소가 많다. 실제로 교육 및 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은 종교적 형평성을 벗어난 사례들이 많이 있다.

고위공직자가 주관하는 간담회에 종교지도자를 초청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합헌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세속적 모임에서 종교적 이익과 관련된 약속이나 타종교에 대한 종교적 비판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종교갈등의 불씨로 작용될 수 있다.

4) 종교시설에서의 공적 행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시설에서의 투표소 설치의 위헌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종교시설에서의 투표소 설치의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종교를 갖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높다는 인권위원회의 판단이다.

공직자가 주최하는 공적 모임을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것은 위헌이다. 다만 종교시설에서의 공적 모임의 개최는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본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문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세속적 목적과 해당 종교의 진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이 문제는 종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5) 종교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제한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행사, 집회는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정치적 목적이나 세속적 목적이 강한 경우에는 일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시청, 구청 등의 행정관청이 종교집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 관련 규칙에 따라 휴일과 방과 후에 대여가 가능하지만 특정 종교에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전도행위는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평온권, 공공장소 이용권 등)를 침해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광고에 특혜를 주는 것은 위헌이며 부착 위치와 공공성에 따라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진흥할 목적이거나 결과가 된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

6) 종교를 이유로 한 채용 등 불이익

종교, 신앙 등을 임용, 승진의 조건으로 하거나 업무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 위헌으로 취소소송 및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종교를 달리하는 직원에게 보다 의도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부과하는 것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직장 외의 종교행사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배치전환 등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외부의 특정 종교 의식에 참여했는지를 체크하여 업무상 불이익을 고지하는 것은 하급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7) 교육영역

종립학교의 경우 종교전파의 자유, 학부모의 경우 종교교육을 시킬

자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추첨에 의한 강제배정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³³⁾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기도를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를 위반한 행위이다. 반면에 사립학교의 경우 강제적으로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IV. 한국사회의 종교갈등 해소방안

1. 종교갈등의 불교적 해소방안

부처님 재세시 인도 사회에서도 종교적 갈등은 있었다. 상수제자인 목련 존자의 순교는 당시 불교계뿐만 아니라 인도 사회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을 대상으로 한 이교도의 공격도 있었다. 제바달라의 사주를 받은 자객들이 부처님을 공격하거나, 무지하고 호전적인 자이나교도나 바라문교도들이 부처님을 공격한 일도 있었다.

『증일아함경』 권제41 『마왕품』 제45에 마가다국의 자이나교 신도인 시리굴 장자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한 내용이 나온다. 시리굴은 육사외도 무리들의 계략에 빠져서 부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뒤 부처님이 들어오는 통로에 함정을 파고 음식에 독을 풀었다. 시리굴의 집 앞에 도착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먼저 먹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제자들과 신도들이 부처님께서 시리굴 장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막고 나섰다. 그 때 부처님은 결코 남의 해침을 당하지 않으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시리굴의 치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神通력으로 전혀 해침을 당하지 않

33) 기독교계인 대광고등학교에서 강의석군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종교계 학교라고 해도 학생들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자 두려움을 느껴 참회하며 사실을 털어 놓았다. 그리고 시리굴 장자는 금일부터 외도들을 믿거나 가르침도 받지 않고 공양조차도 하지 않을 것을 부처님께 맹세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시리굴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는 지금부터 변함없이 모든 외도들을 공양해야 한다. 모든 짐승에게 공양을 베풀어도 복이 무량하거늘 하물며 사람들에게 있어서랴?”³⁴⁾고 하여, 외도들에게도 공양을 베풀 것을 당부하였던 것이다.

부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으로 이 사건은 무마되었고, 시리굴 장자는 죽을 때까지 부처님의 신도가 되겠다고 서원하였다. 이 가르침은 종교간의 갈등과 그 잔혹함이 얼마나 큰 악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당사자를 반성하고 참회하도록 이끌어 내며, 용서와 화합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다.

종교간의 갈등은 무지로부터 비롯된다. 반대로 종교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지혜로써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는 것과 갈등의 당사자들을 잘 교화시키는 능력과 방법을 통해서이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폭력을 부르고 그 폭력은 악순환이 되어 사회 전체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게 된다. 시리굴 사건은 부처님의 수승한 지혜와 중생의 교화력이 초기 교단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왓지국의 사마(Sama)촌에 계실 때, 자이나교의 지도자 니간타가 죽었다. 그 때, 자이나교도들 사이에 심한 분쟁이 일어났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없애는 일곱 가지 법[七滅諍法]을 말씀하셨던 것이다.³⁵⁾

34) 『大正藏』2, p.775b.

35) 『중아함경』 권제52 「주나경」(『大正藏』1, p.754a). ; 『사분율』 권제47 「멸쟁건도」(『

첫째, 싸움의 당사자를 대면시키거나 교법을 현전에서 인증하여 평결해야 한다(現前毘尼).

둘째, 본인의 잘못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다른 이가 당시의 상황을 진술해 주어 본인이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평결해야 한다(憶念毘尼).

셋째, 정신적 결함으로 범한 잘못은 일단 허물을 묻지 않고 건강이 회복되어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으면 정상으로 인정해야 한다(不癡毘尼).

넷째, 잘못이 있더라도 억압적으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고 고백하게 하여 평결해야 한다(白言毘尼).

다섯째, 견해의 차이가 심하여 논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해 평결해야 한다(多語毘尼).

여섯째, 잘못을 범한 사람이 죄 자체를 부인하거나 무거운 죄를 가볍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대중이 갈마를 통해서 죄를 다스리고 본인 스스로 죄를 고백할 때를 기다려 벌을 주어야 한다(罪處所毘尼).

일곱째, 대중이 두 패로 갈려서 논쟁이 끝나지 않을 경우에 양편의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쟁을 그칠 방법을 논의하여 결론을 끌어내고 양편 모두가 그 결론에 따르게 하고 재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草覆地毘尼).

2010년 10월 한국 개신교 찬양인도자학교 23기 학생 10여 명이 ‘봉은사 땅 밟기’라는 명목으로 대웅전을 비롯하여 주요 전각에 들어와 기독교식 기도를 한 사건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봉은사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주요 불교국을 방문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고 그 악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이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행위를 한 학생들뿐만

大正藏』22, pp.913c-915c).

아니라 개신교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산되면서 해당 교회의 목사와 담당 간사, 그리고 동영상상을 만든 학생들이 2010년 10월 27일 봉은사를 방문하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이에 대해 봉은사 측은 “남을 배려하고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청년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일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종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한국 사회의 화합을 다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사과를 받아들일겠다”고 밝혔다.³⁶⁾

이 사건은 한국 개신교의 배타성 때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불교계는 부처님의 칠멸쟁법 중 제5와 제4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악행을 저지른 학생들을 억압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인터넷이나 매스컴, 그리고 국민여론과 기독교내의 비판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의 참회를 받아들였다. 이로서 큰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종교갈등이 다소나마 완화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교 교단은 인욕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사회에 큰 모범을 보여주었다. 부처님은 서방 수로나로 전도를 떠나려는 부루나 존자에게 “인욕을 성취하면 난폭한 사람들 가운데 머물 수가 있다.”³⁷⁾고 말씀하신 바 있다.

불교는 ‘전도선언문’³⁸⁾에서도 언급했듯이 무엇보다도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우선시하고 있기에 여타의 종교단체보다도 평화적인 포교 방법을 지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다양한 종교와 공존할 수 있는 무한한 포용성을 구비하고 있다. 진일보하여 『법화경』의 『방편품』 제2와 『비유품』 제3에서 강조한 회삼귀일의 원융무애한 일승사

36) 『불교포커스』, 2010년 10월 27일자 기사 (<http://www.bulgyofocus.net/news> 참조).

37) 『잡아함경』 13권(311경) (『大正藏』2, p.89c). ; 동국역경원(1993), 『한글대장경잡아함경』[1], p.367.

38) 『南傳藏』12, p.180.

상도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된다.³⁹⁾ 삼승이 국집하는 각자의 수행법을 버리지 않고도 모두 하나의 일승으로 통합·통일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화경』의 『상불경보살품』 제20에서는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과지도 미래의 부처님처럼 생각하며 예배·공경하며 구제하는 적극적인 보살행이 역설되고 있다.⁴⁰⁾

일연스님도 그의 저서 『법화제목초』(1266)에서 일승의 묘법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총괄하여 絶·具·開·蘇生の 4가지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즉, ‘묘법(妙法)’이란 절대 최고의 진리로서[絶] 모든 것을 평등하게 수용·통합함[具]과 동시에 모든 것에 눈을 떠[開] 참으로 살아 있게 한다[蘇生]고 하였던 것이다.⁴¹⁾

이러한 불교의 원융무애한 사상은 무조건 세상의 갈등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교는 모든 논쟁과 분별을 초월함으로써 모든 종교를 통합시킬 수 있는 차원 높은 유화적·초월적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⁴²⁾

불교계가 이와 같은 좋은 마음과 이상적인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이웃종교인들의 자성과 자각이 없으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종교간의 갈등은 결국 사회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불교계는 사회와 긴밀한 소통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화합의 원리와

39) 『大正藏』9, pp.5b-16b.

40) 『大正藏』9, p.50c.

41) 이영자 옮김(1990), 『천태법화의 사상』, 민족사, p.53 참조.

42) Sn.884 “진리는 하나이고 제2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진리를 알은 사람은 다투는 일이 없다” 또는 SN.III, p.138f와 『잡아함경』 제2권 37경(『大正藏』2, p.8b)에는 “나는 세간과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세간이 나와 다투다. 법을 말하는 사람은 세간의 어느 사람고도 다투지 않는다. 세간의 모든 현자가 ‘없다’고 승인한 것을 나도 또한 ‘없다’고 말한다. 세간의 모든 현자가 ‘있다’고 승인한 것을 나도 또한 ‘있다’고 말한다.”; 中村元著 楊貞圭譯(1981), 『원시불교』, 비봉출판사, p.63 참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종교갈등의 사회적 해소방안

한국 사회에서 종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종교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종교 차별의 금지, 행복추구권의 실현 등의 이상이 현실 사회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미비한 법령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법적 미비는 행위 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종교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

기존의 법령을 정비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 편향과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종교편향 및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일부 종교인들이 이에 대한 반대로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 법적 규정에 따라서 종교행위의 기준을 설정하고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종교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종교 편향과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하여 윤리 의식과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등을 비롯하여 정부의 주요 소임자들이 종교적 편향과 차별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공직자들이 종교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매우 쉽게 종교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종교와 관계 없이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공직자들이 많을 때 종교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셋째, 종교적 관용과 화합의 정신 확산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종교갈등은 배타성에서 비롯된다. 포교와 선교활동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마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와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모두 인정될 때 종교적 관용과 화합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다종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갈등이 크게 촉발되지 않는 것은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사례로써 봉은사 땅 밟기 동영상이 유포되었을 때, 수많은 인터넷 안티댓글이나 매스컴의 비판적 보도에 의해 행위자들의 사과를 받아낸 사건을 들 수 있다.⁴³⁾ 앞으로도 종교적 관용과 화합의 정신이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수용될 때 종교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넷째, 종교화합을 위한 종교인 대화의 정기적 개최, 종교평화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 종교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여러 종교인들이 모여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면 비교적 쉽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교화합을 촉진할 수 있는 종교인 모임을 결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화합으로 인하여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을 비교한다면 범종교적인 종교평화위원회 결성에 적극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⁴⁴⁾

43) 김태관 논설위원이 기고한 ‘여적’란에서는 크리스천 아카데미 『대화』 잡지 1976년 1월호에 실린 내용인 “바티칸 공의회에 교령에도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중시합니다. 타종교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 올바른 것, 선한 것들은 무조건 배척할 일이 아니지요”라고 인용하면서 “땅 밟기를 한다고 봉은사가 교회됩니까?” “어리석은 몇 명이 100만 안티부르네.” “얼빠진 이들이 기독교를 미신으로 만들어 버렸다. 생각해보라. 땅 밟기를 한다고 절이 무너지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성경구절은 사유할 줄 안다는 뜻 아닌가.”라고 비판하였다. (『경향신문』 2010년 10월 28일자 30면.)

다섯째, 종교 갈등과 차별사례를 다루는 시민법정을 운영하여 일종의 감시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종교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판결하고 종교인들의 악행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조직이 필요하다.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가 억압되거나 신체를 부당하게 구금하는 등의 악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때이다.

여섯째,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체육부를 비롯한 종교 관련 주요 행정기관에 종교 갈등을 다루는 전문 부서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들 부서에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종교갈등이 사회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파악하고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이들 기관들은 정부적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종교별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하고, 극한적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종교단체 상호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최근 일부 종교단체에서 성전(聖戰)을 주장하면서 불교와 대립각을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⁴⁵⁾ 불상을 훼손하고 사찰의 전각에 방

44) 로마교황청에서는 종교간의 대화를 추진하는 위원회를 조직하고 한국에서도 2002년 교황의 지시로 부처님 오신날 봉축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1999년 종교간의 대화를 추진하는 연구 모임인 종교대화 씨튼연구원을 1993년 개설하고 활동 중이다. (관련자료 <http://www.setondialog.or.kr/sd/intro.php> 참조.)

45)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우상이 창궐해 대구상인동 가스폭발과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고, 한국의 대표적 문화자원인 템플스테이를 저지하겠다는 영적 전쟁을 선포한 영상 2개가 유포되고 있다”며, “대구기독교연합회라는 지역 공식 조직이 문제의 동영상 제작했다고 하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법보신문』, 2010년 10월 27일자 참조.)

화를 시도하는 맹신자들로 인하여 불교계는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같은 악행을 불교계만의 노력으로 막아내기는 역부족이다. 불교계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악의를 가지고 불교를 공격하려는 조직체가 있다면 종교갈등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불교계의 주요 종단들이 인육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불교계 전체의 신행단체나 개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종교간의 대화로 종교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한다. 그러나 대화만으로 갈등을 완화시키고,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진홍 교수는 종교간의 대화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한 바 있다.

“저변에 자리하고 있는 종교에서 발언하는 음조와 또 저변의 자리에서 정점을 향해 발언하는 음조는 같을 수 없다. 실은 이렇게 마주하는 대화의 음조를 조율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식인들의 지적 만남, 또 교양 있는 부드러움, 이런 것을 가지고 다 자기식대로 이해를 하면서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각계의 종교 공동체를 이루는 일상적 구성인들의 마음 열린 만남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⁴⁶⁾

이와 같은 주장은 “종교간의 대화만으로 종교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간의 대화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모든 것을 ‘종교간의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만능주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종교간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종교갈등이 사회적 혼

46) 김승혜·양은용·차옥송·노길명 저(2002), 『한국 신종교와 그리스도교』 바오로딸;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홈페이지 자료 <http://www.gigabon.com> 참조.

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종교 주체들의 각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 주체들의 역할도 필요하다. 나아가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종교평화위원회의 결성 및 활성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예방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들도 종교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된 시민의식을 형성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종교단체에 대한 준엄한 비판과 감시가 요청된다. 특히 매스컴의 비판적 정론이나 인터넷의 안티댓글도 공론형성과 갈등해소에 건인차 역할을 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종교계의 개별 단체들도 각자 올바른 신행활동을 영위하면서 선의의 경쟁 속에서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이 한국 사회의 종교갈등을 완화시키고, 종교인들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大正藏』 1권, 2권, 9권, 22권.

『南傳藏』 권12.

Saṃyutta-Nikāya. III. PTS. 1910.

Suttanipāta. PTS. Reprint 1948.

『한글대장경 잡아함경』 [1], 동국역경원, 1993.

김승혜·양은용·차옥승·노길명 저, 2002, 『한국 신종교와 그리스도교』, 바오로
딸,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홈페이지 자료 <http://www.gigabon.com> 참조.

김응철, 2008, 『종교분쟁으로 인한 국론 분열의 폐해』, 2008년 8월 조계종 중
앙종회 연수자료집.

데이비드 밀스 저/ 권혁 옮김, 2010, 『우주에는 신이 없다』, 돌출새김.

리처드 도킨스 저/ 이한음 옮김, 2007, 『만들어진 신』, 김영사.

문화체육관광부, 2009,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교재』.

박찬운, 2008, 『인권법』, 한울.

빌프리트 뢰리히 지음/ 이혁배 옮김, 2007, 『종교근본주의와 종교분쟁』, 바이
북스.

성열 엮음, 2002, 『부처님 말씀』, 현암사.

송기춘, 2006, 『시민적·정치적 권리』, 『인권법』, 아카넷.

윤문희, 2006, 『차별의 법적 개념』, 『노동리뷰』 제21호, 한국노동연구원.

이시카와 준이치 저/ 윤순길 옮김, 1996, 『종교분쟁지도』, 자작나무.

이삼열 편저, 2005, 『아시아의 종교분쟁과 평화』, 오름.

이영자 옮김, 1990, 『천대법화의 사상』, 민족사.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편/ 남현옥 역, 1993, 『중국불교와 불교문화』,
우리출판사.

차동엽 신부, 『도올 사상에 대한 가톨릭적 비판』, 2008년 6월 7일자,
<http://blog.naver.com/islmoa/120052726425>.

칼 세이건, 2010, 『과학적 경험의 다양성』, 사이언스북스.

Richard Dawkins, 2007, *The God Delusion*, Brockman Inc.

中村元 著/ 楊貞圭 譯, 1981, 『원시불교』, 비봉출판사.
 保坂俊司, 2008, 『世界の宗教問題の基本』, 東京: 青春出版社.
 島崎晋, 2002, 『目からウロコの民族.宗教.紛争』, PHP研究所.
 長谷川慶太郎, 2001, 『長谷川慶太郎が探査する21世紀の行方 過激派テロと民族宗教紛争』, 青萌堂.

<http://ko.wikipedia.org/wiki>

『경향신문』 2010년 10월 28일자

『뉴스 파워』 2008년 11월 24일자.(<http://www.newspower.co.kr>)

『미주 한국일보』 2010년 8월 4일자.

『불교포커스』 2010년 10월 27일자.(<http://www.bulgyofocus.net/news>)

『법보신문』 2010년 10월 27일자

『백찬홍의 세상보기』 2009년 1월 18일자(<http://btmkt.egloos.com/2427944>)

『연합뉴스』 2010년 9월 8일자.

『호주 동아일보』 2009년 1월 30일자.

『크리스천 투데이』 2008년 3월 6일자.

[Abstract]

A Study on the Types of Religious Conflicts in Korea and their Resolutions Based on Buddhist Philosophy

Ven. Sung-woo(Seo, In-lyeol)

There was once a heightened expectation that the 21st century would be an era of peace and stability as humanity seemed to put an end to the cold war. To the contrary, Islamic fundamentalists committed a terrorist attack on the United States in September 2001, and the US invaded Afghanistan in retaliation. In 2003, the US also invaded Iraq claiming it possess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was

a threat to world peace. This can be described as a clash of civilizations between Islam and Christianity. The crucial challenge of the 21st century will be how to resolve religious conflicts. Religious conflict occurs in Korea t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igious conflicts in Korea and to present ways to resolve them. To be able to do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clearly define what "religious conflict" is. In this study I will limit the scope of religious conflicts to conflicts between different religions in Korea rather than internal struggles within a certain religion. I categorized the types of religious conflict according to their degree of intensity. The categories are: religious prejudice, religious discrimination, religious dispute, religious war, and ethnic cleans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types of religious conflicts mostly occurring in Korea at present are religious prejudice and religious discrimination, which precede the stage of religious disputes. In addition, two factors provide a mitigating effect to Korea's religious conflicts. First, half of the population claims no religious preference. Second, the consciousness level of citizens is relatively high. Especially, Buddhism has advocated inter-religious dialogue and harmony since the time of the Buddha. Buddhism also has the seven rules for settling disputes, which should help relieve interfaith conflicts. However, even though these provide necessary guidelines, they may not be sufficient. No matter how much Buddhism applies good faith and ideals, if the followers of other religions don't make similar efforts, religious conflicts are bound to recur. What is needed is to publicize Buddhist ways of resolving conflicts and to provide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prevent conflicts beforehand.

Key Words: religious conflict, religious discrimination, religious dispute, ethnic cleansing, seven rules for settling disputes.

성우(서인렬)는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앙
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이다. 저서로는 『범화경 연구』가 있으며, 관심
분야는 『범화경』과 천태사상 및 포교학이다.

[2010. 11. 12. 투고; 2010. 12. 16. 수정; 2010. 12. 17. 채택]